820조 예산안 처리 시한 코앞인데… 여야 대치에 협상 '난항'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내달 2일까지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최대 쟁점
예결위 이번주 소소위 체제 가동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과 이재명 정부 주요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안보다 12.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일종의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예결위는 24일부터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는 소소위를 연다. 여야가 주요 사업을 두고 예산소위 평행선을 달려, 이견이 큰 사업은 소소위에서 계속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소소위의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계정을 담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45조4000억원의 사업 지출 중 청년 계정에 13조3000원을 편성해 일자리·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동력 계정엔 14조2000억원을 편성해 AI·전략기술, 지분 투자, 전력·용수 인프라에, 지방 계정엔 10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방 성장, 생활편의시설, 행정통합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계정엔 7조6000억원을 편성해 첨단인재 양성, 고등·영유아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12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투자 및 재정 안정 대응을 위해 1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편성 예산 대부분을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AI(인공지능)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맞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안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재경위원의 불참 속에 민주당 재경위원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상황이다.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162조3000억원), 협동조합사업(819억원), 사회연대경제사업(633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7925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00억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1조8210억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3억원) 등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연말 정국이 급랭되면서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파기환송을 계기로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안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이재명 정권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용철 청문회 앞두고 '공소 취소' 공방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 '先 진상규명' 입장만 반복
野 보이콧 속 민주당 단독 일정 확정



오는 24일 열리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경우 야당의 공세 명분이 약해진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라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여당 주도로 확정됐고, 자료 제출 지연 논란까지 겹치며 '반쪽 검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지명된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선(先) 진상규명 후(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라는 취지로 응답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승원 전 후보자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성남 라인'인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 권한과 사건 이첩권이 이미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낙인찍기'라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 역시 '반쪽' 검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고,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은 의결이 보류됐다. 아울러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하고 성남시장직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이력을 둘러싼 '성남 라인' 독립성 논란, 재단 대표 시절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 변호사 시절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를 변론하는 등의 형사 사건 수임 이력, 농지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신고 연장 없이 방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변호사 휴업 신고 누락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조희대 탄핵 속도… 법조계는 회의적

당론 채택하고 연내 국회 처리 목표
'중대한 위법 행위' 입증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소추안(탄핵안)에 최종적으로 어떤 사유를 적어넣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추진단)' 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나 헌정 수호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조 대법원장은)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에 위협이 된다"면서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순응·협력 매뉴얼 의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또 양부남 단장을 포함한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참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이 사유로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양부남 단장은 앞서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어제(19일)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어떤 사유든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는 시선이 엇갈린다.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장동혁 "청년 미래 약탈하는 李 정권"

국민의힘,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당 청년정책기획단으로부터 4대 분야 16개 정책 제안을 전달 받고 "청년이 공감하고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책들로 이재명 정권의 국정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여러분의 제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국민의힘의 미래 정책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주거, 금융, 연금 등에서 실정을 거듭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약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바로 청년 미래 약탈 정권"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사실상 절벽이다. 이력서 100통을 넣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전세 실종, 월세 폭등으로 청년 주거는 악화일로"라며 "열심히 벌어도 월세는 내느라 돈을 모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상장지수펀드)를 만들었다가 청년들의 주식 통장까지 탈탈 털리고 있다"며 "청년들의 미래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 시험들이 AI(인공지능) 컨닝의 경연장이 됐다"며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나아가 "이제 불안감이 논술과 내신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Start, 다시 올라갈 기회'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행사에선 ▲'기금운용제 예외 규칙 사후검증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 변경 위한 예외 조건과 위험 분석 의결 전 공개 및 1년 뒤 사후 평가 공개 보고 등이 제안됐다. /박태홍 기자